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격차*

정준호**

Employment Gap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Korea*

Jun Ho Jeong**

요약: 이 논문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심화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격차를 산업·직업별 일자리의 공간 분포 분석, 4년제 대졸자의 지역별 하향 취업률 산정, 일자리 접근법을 이용한 지역별 일자리 분포 추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수도권의 제조업 고용감소가 전체 고용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과 관리전문사무직의 비중이 늘고 있다. 둘째, 비수도권에서 임금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더 높다. 셋째,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수도권의 하향취업률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수도권의 그것은 이와 달리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횡보한다. 넷째, 분배 측면에서 일자리의 분포 패턴을 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수도권에는 저임금과 고임금 일자리가 동시에 증가하고 중간 일자리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양극화 패턴인 U자형이 나타나고, 반면 수도권에는 고임금 일자리 증가가 주도하는 좌우가 뒤바뀐 L자형 패턴이 드러난다. 다섯째, 비수도권 분위별 일자리 분포가 2010년대 중반 이후 양극화 패턴을 보여주는 것은 중간 분위 일자리를 다수 차지하는 제조업 고용변동과 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지역 제조업 고용변동이 전체 고용변동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고용감소는 해당 지역의 상용직 고용률을 떨어뜨리며, 비수도권에서 부정적 고용효과가 더 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해 구상과 실행의 공간적 분리에 따른 분공장 경제, 지리적 이동성과 숙련 이동성의 혼합,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고용 가능성 제고와 일자리 문제, 단기와 장기 대응 등의 정책적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일자리, 2010년대 중반, 제조업, 양극화

Abstract: Using Regional Employment Survey, this article analyzes the widening employment gap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rough describ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mployment by industry and occupation, calculating the regional downward employment rate of university graduates, and estimating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employment growth in terms of wage distribution, and then statist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the declining manufacturing employment in the Non-Capital region since the mid-2010s on total employment change. The results from thes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since

* 이 글은 정준호, 2023,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고용격차,” 이규용 편, 한국의 지역고용전략: 도전과 과제, 연구보고서(pp.118~154), 세종: 한국노동연구원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Real Estat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jhj33@kangwon.ac.kr)

the mid-2000s, the share of producer services and white-collar jobs has increased in the Capital region. Second, the Non-Capital region has a higher share of non-regular workers relative to wage workers than the Capital region. Third, while the downward employment rate has increased in the Non-Capital region since the mid-2010s, it has risen very modestly or stagnated in the Capital region. Fourth, in terms of wage distribution, the pattern of employment growth since the mid-2010s has been U-shaped, a typical polarized pattern of simultaneous growth in low- and high-wage jobs and decline in middle-wage jobs in the Non-Capital region, while in the Capital region it has been L-shaped with the sides reversed, driven by growth in high-wage jobs. Fifth, this employment polarization in the Non-Capital region since the mid-2010s is associated with employment changes in manufacturing, which accounts for a large share of middle wage jobs. Finall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regional manufacturing employment changes on total employment changes since the mid-2010s, declines in manufacturing employment reduce the region's regular employment rate and have a larger negative employment effect in the Non-Capital region. Based on these findings, some policy issues are discussed including the branch plant economy regime based on spatial separation of conception and execution, the mix of geographic and skill mobility, the need to improve employability and jobs through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short- and long-term responses to employment fluctuations.

Key Words :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Employment, Mid-2010s, Manufacturing, Polarization

1. 서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득과 일자리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의 수도권으로 순이주 유입이 늘어나고, 소위 화이트칼라로 대표되는 괜찮은 일자리 증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비수도권에서는 양호한 일자리인 제조업 일자리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다(정준호, 2021).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일자리의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문제는 소득과 기회와 연관된 문제인데, 특히 대도시에서 일자리 기회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문제다. 하지만 우리 상황이 더욱더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일자리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에 관한 실태와 요인에 관한 최근 연구가 그리 많지는 않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이성균(2011)은 ‘좋은’ 일자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수

도권과 영남권에서 높다고 지적한다. 이는 두 지역이 각각 고임금 안정적 화이트칼라 직업군과 중화학공업의 고임금 생산직 종사자가 집중된 지역이라는 데 기인한다. 이상호(2013)는 2000년과 2010년 인구센서스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 최상위 10%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고용 질의 양극화가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고용대책이 ‘각자도생하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주장한다(이상호, 2022). 이정록(2019)은 전남 광양 제철소 협력사를 사례로 비수도권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구직과 구인 간 미스매칭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 기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와 회복력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한 임석희·송주연(2022)은 고용의 회복력 측면에서 수도권 도시가 비수도권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보고한다. 또한, 2020년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활용한 상명성·문영만(2024)은 비수도권 대졸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만큼이나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 기존 연구는 2010년대까지 양과 질적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격차 실태를 드러내며, 또한 2010년대 이후를 다룬 최근 연구도 고용 측면에서 수도권의 질적 우수성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고용 규모가 줄어들고, 저출산 문제가 두드러지고, 지역 간 소득과 일자리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정준호·이일영, 2023). 이러한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격차가 양과 질적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이를 어느 정도 결정하는 비수도권의 제조업 일자리 변동이 전체 고용 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글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고용격차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일자리에 대한 산업·직업별 공간 분포 분석, 4년제 대졸자의 지역별 하향취업률 산정, 산업과 직업을 쌍으로 하여 이를 서열화하는 일자리 접근법을 이용한 지역별 일자리 분포 추정이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격차를

일으킨 요인 중 하나가 비수도권의 제조업 고용이 줄어든 것이다. 비수도권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는 2015~2022년 기간에 대해 이러한 비수도권 제조업 고용변동이 전체 고용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절은 일자리의 지역별 분포, 하향 취업률의 산정, 일자리 접근법에 따른 일자리 분포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격차를 들여다본다. 3절은 2015~2022년 기간에 대해 지역의 제조업 고용변동이 전체 고용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전국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추정한다. 4절은 기존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격차

1) 일자리의 산업·직업별 공간 분포

그림 1은 각 산업 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 즉 산업별 공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각 산업의 수도권 점유율이 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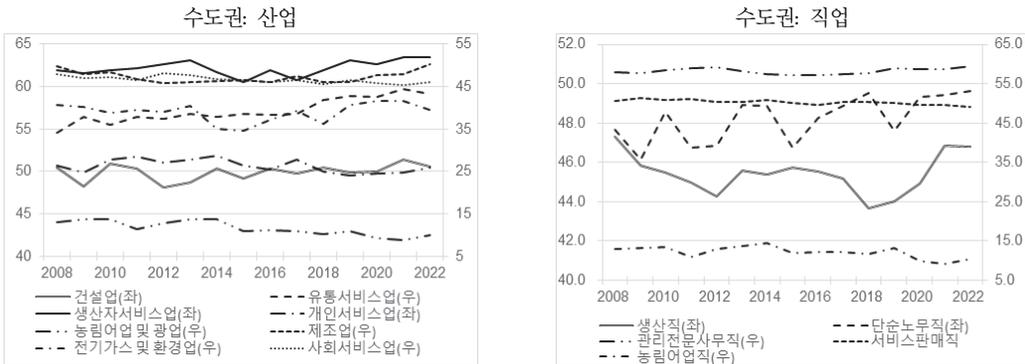


그림 1. 산업·직업별 지역별 비중(%) 추이

주: 1) 농림어업 및 광업(01~03, 05~08); 제조업(10~33); 전기·가스 및 환경업(35~36, 37~39); 건설업(41~42); 유통서비스업(45~47, 49~52, 58~63); 생산자서비스업(64~66, 68~69, 70~73, 74~75); 사회서비스업(84, 85, 86~87, 99); 개인 서비스업(55~56, 90~91, 94~96, 97~98)

2) 관리·전문·사무직(1, 2, 3); 서비스·판매직(4, 5), 농림어업직(6), 생산직(7, 8), 단순노무직(9)

3) 2008~2010년 연도별, 2011~2012년 3/4분기, 2013~2022년 2/2 하반기 자료를 이용함.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이하인 산업은 농림어업 및 광업(10.0%), 전기가스 및 환경업(39.4%), 사회서비스업(46.1%)이고, 그 비중이 50% 안팎인 산업은 제조업(50.2%), 건설업(50.5%), 개인 서비스업(50.5%)이다. 또한, 수도권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생산자서비스업(63.5%)이고 그 뒤를 유통서비스업(59.2%)이 따른다.

전술한 생산자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업은 수도권 비중이 가장 큰 산업으로, 그 비중이 2010년대 중반 이후 더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금융·보험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사업서비스, 출판·방송·통신 등으로 구성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수도권 비중이 매우 높으며,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비수도권의 비중이 컸던 제조업도 수도권에서 2010년대 후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다. 건설업의 수도권 비중도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반영하듯이 2010년대 초반 이후 점차로 상승했다. 또한, 2010년대 중반 이후 농림어업 및 광업과 개인 서비스업의 수도권 비중은 하락하다가 최근 다소 반등했다.

2022년 기준으로 직업별 수도권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은 59.5%로 관리·전문·사무직이며, 그 뒤를 단순노무직(49.6%), 서비스판매직(49.2%), 생산직(46.8%), 농림어업 및 광업(10.5%)이 따른다. 따라서 직업별로 보면 양질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비중이 높다. 한편, 2008~2022년 기간에 직업별 공간 비중의 변동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서비스판매직은 매우 완

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농림어업 및 광업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관리·전문·사무직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에서 지식 기반 서비스업 비중이 상승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마찬가지로 생산직 비중도 2010년대 후반 이후 증가하는데, 이 또한 2010년대 후반 이후 수도권의 제조업 비중 증가세와 연관이 있다. 그리고 단순노무직의 수도권 비중은 경기변동에 따라 증가와 하락을 반복하면서 추세적으로는 상승세이며, 이는 고용변동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양질의 일자리 공간 분포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큰 문제 중 하나가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별로 노동시장이 이중으로 분단되어 있다는 것이다(정이환·전병유, 2001; 남재량, 2007; 정준호·남중석, 2019). 특히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허용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식되며, 비정규직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것과 동일시된다. 물론 ‘비정규직 증가 = 양질의 일자리 감소’의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비정규직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다.

그림 2는 지역별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나타난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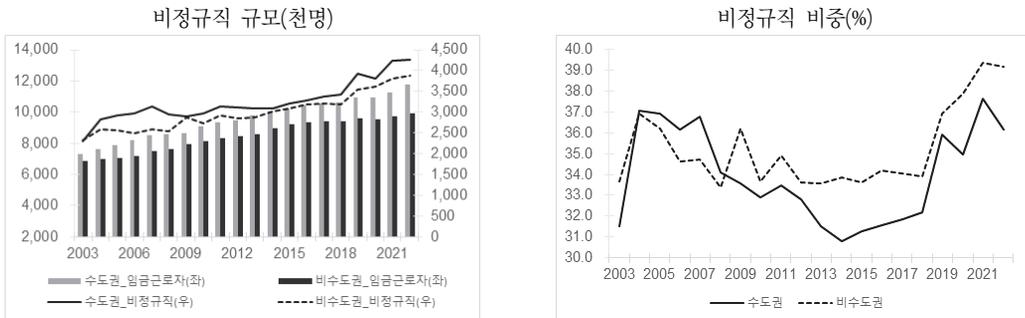


그림 2. 비정규직의 지역별 규모와 비중 추이

주: 각 연도 8월 기준임.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정규직 규모와 비중 추이를 보여준다. 2003~2022년 기간에 수도권의 비정규직 규모는 1,960천명이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1,574천명이 증가하여, 규모로 보면 수도권 비정규직이 비수도권의 그것보다 크다. 그런데 수도권의 임금 근로자는 같은 기간에 4,477천명, 비수도권에는 3,052천명으로 늘어나 임금 근로자 규모와 비교한다면 비수도권의 비정규직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다.

이를 반영하듯이 2004~2014년 기간에 수도권의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들었으나, 그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다. 반면에 비수도권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줄어들었다가 2010년대에는 회복하면서 점차 상승하더니 2018년 이후 많이 증가했다. 2018년 이후 많이 증가한 것은 통계청의 비정규직 정의¹⁾ 변화도 이에 한몫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2009년 이후 비수도권의 비정규직 비중이 수도권의 그것을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원과 제주의 비정규직 비중이 다른 시도보다 매우 높는데, 이는 이들 시도가 농업과 서비스업 등으로 고용의 질이 양호하지 않은 산업구조 영향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처럼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제조업에서도 문제지만 특히 서비스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일자리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4년제 대졸자의 하향취업률을 들 수 있다. 이는 취업자의 학력 수준이 관련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학력 수준보다 더 높은 경우를 말하며, 일자리-학력 간 미스매치를 보여준다. 이 지표는 장기적으로 학력 과잉에 따른 인적자본 이용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며, 반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의 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김기홍, 2018; 오삼일·강달현, 2019).

이 절에서는 오삼일·강달현(2019)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여 2008~2022년 기간에 대졸자의 지역별 하향취업률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일자리 질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본다. 이들은 4년제 대졸자가 고졸 이하 학력 수준이 있어야 하는 일자리에 취직한 경우를 ‘하향취업’

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는 개별 취업자의 학력 수준과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개별 취업자의 하향취업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이들은 대졸 취업자가 관리·전문·사무직 종사자, 즉 화이트칼라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를 ‘적정취업’이라고 하고,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등 그 외 직업에 취직한 경우를 ‘하향취업’으로 구분한다(오삼일·강달현, 2019).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경제 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4년제 대졸자 수는 2008~2022년 기간에 연평균 3.1% 증가했지만, 적정 일자리인 화이트칼라 취업자 수는 연평균 2.0% 증가에 그쳤다. 따라서 적정 일자리 증가가 4년제 대졸자의 그것을 못 따라갔다.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에 4년제 대졸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3.0%이지만, 비수도권의 그것은 3.2%로 후자가 더 크다. 한편, 화이트칼라 일자리인 적정 일자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연평균 2.1%와 1.9% 증가하여 수도권의 연평균 증가율이 비수도권의 그것을 웃돌았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4년제 대졸자 증가 대비 적정 일자리 증가가 더 크므로, 양질 일자리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많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4년제 대졸자 대비 적정 일자리 비율이 2008년 0.772에서 2022년 0.663으로 줄어들어 대졸자와 적정 일자리 간 갭(gap)이 커졌다. 수도권의 경우 그 비율이 2008년 0.793에서 2022년 0.698로, 또한 비수도권도 0.743에서 0.61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에 감소 폭이 수도권이 0.095이지만 비수도권은 0.125로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크다. 전반적으로 2008~2022년 기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4년제 대졸자와 적정 일자리 간 갭이 계속해서 늘었는데, 그 갭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더 크다. 또한, 그 추세가 2015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에서는 대졸자와 적정 일자리 간 갭이 매우 완만하게 늘다가 최근에 그 갭이 줄어들거나 회복하고 있다. 반면에 비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비교하면 그 갭이 더 늘고 있다. 또한, 2020년을 기점으로 다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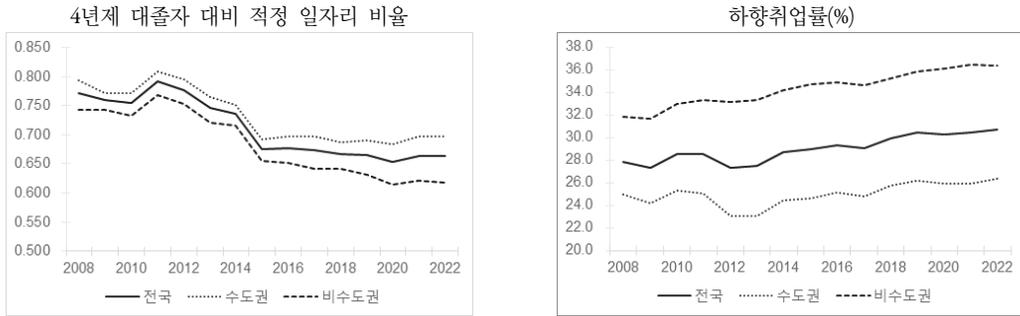


그림 3. 대졸자 및 적정 일자리 및 하향취업률

주: 2008~2010년은 연도별, 2011~2012년은 3/4분기, 2013~2022년은 2/2 하반기 자료를 사용함.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반전하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19 보건 위기로 대졸자 취업자와 적정 일자리 증가가 이전보다 더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년제 대졸 취업자 대비 하향취업자 수로 정의한 하향취업률은 전국 차원에서 2008년 27.8%에서 2022년 30.7%로 늘어났다. 이는 하향취업률이 2000년대 들어 지속해서 늘어나고 최근 30%를 웃돈다는 오삼일·강달현(2019)의 분석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 지역 차원에서 하향취업률을 분석해 보면, 수도권의 하향취업률은 2008년 24.9%에서 2018년 26.3%로 1.4%p 증가했으나, 비수도권의 그것은 2008년 31.8%에서 36.4%로 4.6%p 늘어났다. 하향취업률은 2010년대 초반 이후 지속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수도권에서 하향취업률이 증가하고 수도권의 그것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다. 그리고 하향취업률의 수준 자체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매우 크다.

이처럼 비수도권의 하향취업률 자체가 수도권의 그것보다 큰 것은 분공장(branch plant) 경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준호, 2021). 이는 구상과 실행 기능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면서 해당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이 요구하는 주요 숙련 수요가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한다(Massey, 1984). 예를 들면, 수도권에는 기업 본사와 연구개발 기능이 집중하고 있으므로 구상 기능을 수행하는 고숙련 노동을 상대적으로

더 요구하게 되고, 반면 비수도권에는 공장이 주로 입지하므로 실행 기능을 수행하는 생산직 관련 숙련이 더 필요하게 된다.

또한, 전국 차원에서 하향취업률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은 고학력 일자리 수요가 4년제 대졸자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오삼일·강달현, 2019).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은 공간적 차원에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하는 것은 더 어려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질의 일자리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정준호, 2021).

3) 일자리 접근법에 따른 지역별 일자리의 분포 변화

분배 측면에서 일자리의 분포 변화는 기술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직업구성의 변화라는 수요 요인, 고령화와 고학력화로 대표되는 공급 요인, 그리고 노동시장 불평등 효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전병유·정세은, 2017).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업과 직업으로 구성되는 쌍을 하나의 일자리로 정의하고 그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중위 또는 평균 임금을 이용해 이를 서열화하는 일자리 접근법이 있다(CEA, 1996; Wright and Dwyer, 2002; Eurofound, 2013).

이는 산업·직업의 쌍을 하나의 일자리로 간주하고 각 일자리 임금의 중위값 또는 평균값을 서열화하여 일자리 질을 판단하는 것이다. 중위 또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자리의 서열화는 분석 대상의 초기 연도를 기준으로 각 일자리를 임금 분위별로 나누고 이 분위별로 신규 일자리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전병유·정세은, 2017).

이러한 일자리 접근법에 따라 노동시장의 일자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임금 자료가 신뢰성이 있는 대표 자료이어야 한다. 전병유·정세은(2017)은 1993~2016년 기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전국 차원의 일자리 분포를 분석한 바가 있다. 지역 차원에서 고용과 임금 자료를 제공하는 신뢰성이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지역별 고용조사이다. 물론 이 통계에서 임금 자료가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되어 고용노동부가 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조사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임금 자료보다는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지역 단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전체 고용 분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절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2008~2020년에 일자리 접근법을 적용함으로써 지역별 일자리의 분포를 분석한다.

2021년 이후 지역별 고용조사 A형 마이크로 자료의 접근방식 변경으로 2021~2022년 자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글은 2008~2020년으로 분석 기간을 한정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보건 위기의 여파를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2008~2012년과 그 기간 이후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와 6차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개정으로 시계열의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두 기간은 따로 설정하여 분석된다. 그리고 2013~2020년에 2010년대 중반 이후 고용시장에서 상이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를 2013~2015년과 2016~2020년으로 다시 나눈다. 따라서 2008~2012년, 2013~2015년, 2016~2020년 기간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림 4는 국지 가중 평활 회귀분석(locally weighted smoothing regression) 방법을 이용하여 전술한 일자리 접근법에 따른 지역의 일자리 50 분위별 고용 증가율 추세를 보여준다. 2008~2012년은 일자리 분포가 양극화되지 않은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은 분위별 고용 증가율 패턴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며, 수도권도 분위별 고용 증가율 패턴은 15~45분위 사이에서 고용이 증가하여 역 L자형에 가깝다. 전국 차원에서는 비수도권 영향을 받아 역 U자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시기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20~30분위, 즉 중간 분위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시기에 일자리 분포가 양극화되기보다는 중간 일자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중간 일자리가 없어지는 양극화 경향이 강화된 것과는 사뭇 다르다(Eurofound, 2013).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국경제가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재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조업은 중국과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 결과 그 당시 제조업 고용 규모가 늘어나는 재공업화 시기를 짧게나마 겪었다(정준호, 2021). 이러한 제조업 고용의 신장세는 분공장 경제에서 중간 일자리의 상대적 비중이 큰 비수도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반면에 수도권은 고분위 일자리가 완만하게나마 증가했다. 또한, 최저임금 효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성재민(2014)의 지적, 즉 제도적 요인이 저임금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당시 기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수요 구조 변화가 전국과 비수도권에서 역 U자형 패턴을, 반면에 수도권에서는 역 L자형 패턴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2015년에는 분위별 일자리 분포는 대체로 어느 지역에서나 고용 증가와 음(-)의 선형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에서 저분위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고, 반면 고분위 일자리 증가는 감소했다. 다만, 20~30분위 중간 일자리 증가는 횡보하고 있다. 반면

에 비수도권 경우 음(-)의 선형 관계를 보여주다 50분위 최고 분위 주변에서 일자리 증가가 조금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 영향을 크게 받는 전국 일자리의 분위별 분포는 고용 증가와 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운데, 중간 일자리 증가는 확보했다.

2016~2020년에는 일자리 분포와 고용 증가 간 관계가 이전과는 달리, 특히 비수도권에서 U자형 양극화 패턴을 보여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5년 무렵 중국경제 침체 등으로 조선업과 일부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 조정이 있었으며, 또한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으로 수출 제한이 암암리에 일어났다. 그 당시 비수도권 영·호남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구조 조정으로 한국판 러스트 벨트의 출현에 대한 우려가 심했다. 수도권과 이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전국은 고임금 일자리 증가가 주도하는 좌우가 뒤바뀐 L자형 패턴을 보여준다. 이는 2008~2012년 시기의 패턴과 정반대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저임금과 고임금 일자리가 동시에 증가하고, 중간 일자리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U자형 양극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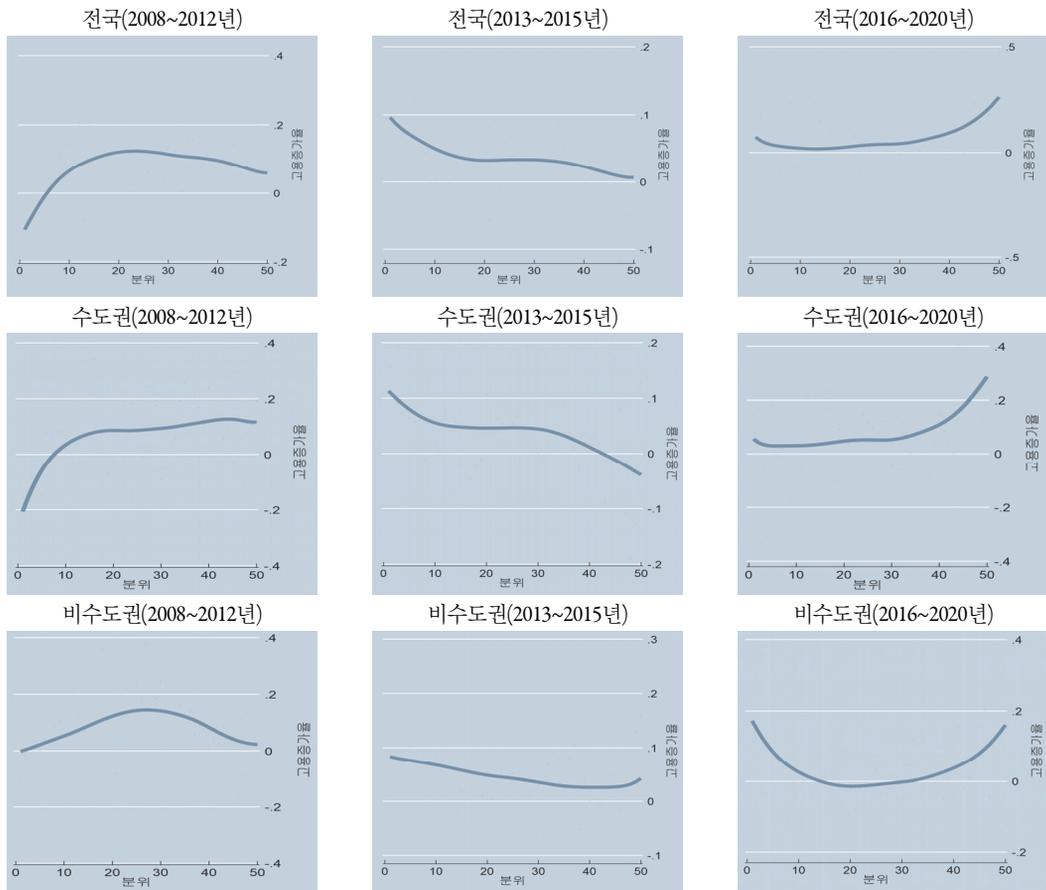


그림 4. 일자리 50 분위별 고용 증가율로 본 지역별 일자리 분포

주: 1) 2008~2010년 연도별, 2011~2012년 3/4분기, 2013~2022년 2/2 하반기 자료를 이용함.

2) lowess의 bwidth는 0.8로 설정하였음.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3. 지역 제조업 고용변동이 전체 고용변동에 미친 효과

1) 분석 배경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산업이다. 앞의 분석에서 일자리 분포가 2008~2013년과 2016~2020년이 대조적인 것은 중간 분위 일자리를 다수 차지하는 제조업의 고용변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는 전국 차원에서 제조업 고용 규모가 2015년을 전후하여 그 이전에는 증가세였지만, 그 이후에는 감소세인 것을 보여준다. 상대적인 척도인 제조업 비중 추이도 마찬가지다. 즉, 전국 차원에서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은 2008년 16.6%에서 2015년 17.6%로 상승했다가 2022년 15.8%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에서는 제조업 고용 규모가 2008~2015년까지는 증가세였지만, 그 이후에는 감소세다. 마찬가지로 그 비중도 2015년 9.4%에서 2022년 7.9%로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 이와는 달리 좀 더 복잡하다. 2012~2015년과 2020~2022년에 제조업 고용 규모와 비중이 동시에 늘어났다. 특히 비수도권과 달리 2019년 이후 수도권 제조업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GDRP 측면에서 보면, 전국 차원에서 전체 GR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7.1%에서 2021년 27.0%로 다소 감소세다. 반면에 절대 규모는 2008년 332.4조에서 2021년 518.5조로 늘어났다. 특히 2009~2011년 사이에 제조업 GDP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호황과 맞물려 나타난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 살펴보면, 수도권 제조업 규모는 2008년 108.6조에서 2021년 224.8조 원으로,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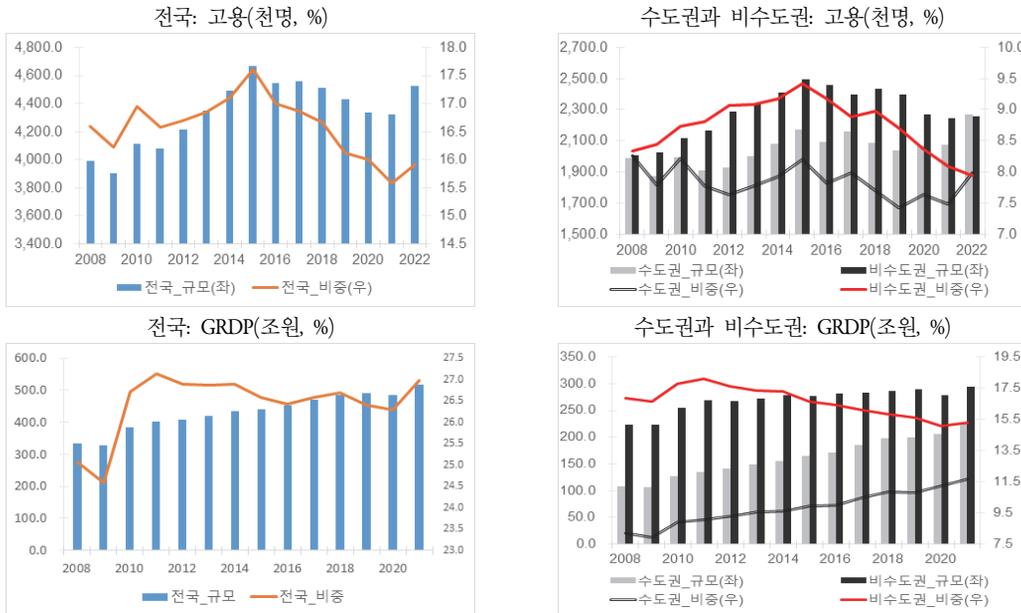


그림 5. 제조업 고용과 부가가치 규모와 비중 추이

주: 1) 2008~2010년 연도별, 2011~2012년 3/4분기, 2013~2022년 2/2 하반기 자료를 이용함.

2) 제조업 GRDP는 2015년 실질 가격 기준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지역 계정

수도권도 2008년 223.8조에서 2021년 293.7조 원으로 늘어났다. 전체 GRDP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2010년 8.9%에서 2021년 11.7%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비수도권의 그것은 2011년 18.1%로 정점을 찍더니 그 후 계속해서 하락하여 2020년 15.1%에 이르렀다. 그러나 코로나19 보전 위기 시기 우리나라 제조업 강세로 비수도권에서도 2021년 15.3%로 다소 반등했다.

비수도권 제조업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구조적인 고용변동이 감지되고 있으며, 제조업 부가가치는 2010년대 초반부터 지역별 점유율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이 부가가치보다 후행 변수이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비수도권이 2015년을 기점으로 제조업 고용이 절대와 상대 측면에서 모두 감소세, 즉 제조업 고용에서 구조적 변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고용감소는 지속해서 중국과 인도와 저임금 국가와의 경쟁 심화, 자본 집약적인 생산 공정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자본재나 중간재 부문에서 한국과 중국 간 교역 관계가 점차 보완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정준호·이일영, 2023).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2015~2022년 기간에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제조업 고용변동이 전체 고용변동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분석 모형

2015년 이후 전국과 비수도권에서 제조업 고용감소는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제조업 고용감소가 두드러진 비수도권에서 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글은 제조업 고용감소가 일어난 2015~2022년 기간을 대상으로 이러한 지역 제조업 고용변동이 전체 고용변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계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주지

하는 바와 같이, 지역 노동시장 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고용시장이 제조업 고용변동에 조정되는 정도는 다를 것이다. 즉 어느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조정될 수 있고, 반면에 다른 지역은 지체될 수도 있다.

식 1은 이 절의 분석에 쓰이는 추정 모형으로, 이는 호주에서 지역의 제조업 변동이 전체 고용변동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Georgeson and Harrison(2015)에 기반한 것이다.

$$\Delta E_{it} = \Delta X_{it}\beta + \Delta \epsilon_{it} \quad \text{식 1}$$

이 추정 모형에 따르면, 시간에 따른 지역 i 의 고용 지표 변동(ΔE_{it})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변동, 그리고 기타 요인을 포함하는 일련의 변수들(ΔX_{it})의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이들 변수는 해당 지역의 제조업 고용변동, 수요변동, 시간당 상대 임금 변동, 기술변화, 노동 이동성 변화, 그리고 기타 요인 등을 포함한다(Georgeson and Harrison, 2015).

전술한 바와 같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종사상 지위 또는 고용 형태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화 또는 분절화가 심하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 분석에서 이용되는 종속변수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률, 즉 15세 이상 인구나 취업자 대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비중이다.

식 1에 포함된 일련의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간 회귀 계수의 예상 부호를 살펴보면, 제조업 고용이 감소(증가)하면 취업률이 감소(증가)하는 양(+)의 관계가 기대된다. 수요 또는 경제 활동이 강(약)한 지역은 제조업 고용 감소(증가)에 더 빨리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 변수는 취업률과 양(+)의 관계로 예상된다. 인적자본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한 지역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취업률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근로자의 지리적(순)이동이 늘(줄)면 근로자는 고용 기회가 더 많은(적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이는 지역 노동시장의 조정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시간당 상대 임금과 노동시장 간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임금이 상승하면 근로자가 해당 지역으로 집중하지만, 기업으로서는 비용이 증가하여 더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부(-)의 고용 충격을 받은 지역의 경우 노동 수요 감소에 따라 임금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한편, 기타의 지역 특수적 효과는 단시간에 지역의 노동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도시의 공간 효과 또는 제도적 효과 등을 말한다(Georgeson and Harrison, 2015).

3) 분석 자료와 방법

이 절의 목표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는 2015~2022년 기간을 대상으로 지역의 제조업 고용변동이 전체 고용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분석 단위는 시군구인데,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우 2008~2020년까지 광역시의 시군구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광역도의 시군구 자료만 공개되지만, 2021년 이후 전체 시군구 자료가 제공된다. 따라서 통계 자료의 가용성 문제와 일관성을 위해 광역도의 시군구 자료가 활용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노동시장 분석에서 중요한 대도시 효과가 배제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 위해 광역시 자료가 이용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광역시와 시군구 공간 단위가 혼재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절의 분석에서 활용되는 변수들이 상대적 변수이므로 이에 따른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역별 제조업 고용변동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률 간 관계는 해당 지역의 지리·문화적 차이, 인구 구조, 사회·경제적 지위, 노동시장 접근성 등에 따른 지역별 효과가 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 이외에도 지역별 효과는 그 수가 많으므로 이러한 모든 효과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지역 특수적인 요인들은 분석 대상 기간에 크게 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별 효과가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다고 가정하는

고정 효과 모형이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하는 데 적합할 수 있다(Georgeson and Harrison, 2015).

두 기간 사이에 1차 차분을 통해 시간 불변의 지역 효과를 추정 모형에서 제거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변수들만 고려할 수 있는 1계 차분 추정 모형이 여기서는 유용하다(한치록, 2021). 이러한 모형에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변수들만이 포함되므로 전술한 시간 불변적인 지역별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들은 이 모형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지역별 요인들이 전체 고용변동에 미치는 효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하면 이러한 지역별 효과를 설명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분석에 활용될 모형은 시간 더미를 포함한 1계 차분 고정 효과 모형이다.

표 1은 분석에 이용된 변수 정의와 2015~2022년 이러한 변수들의 변동에 관한 기술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2015~2022년에 상용직 고용률이 임시·일용직 고용률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정부 대책에 어느 정도 힘입은 바가 크고, 임금 근로자의 고용 증가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졸자 비중과 1인당 사업체 수 등도 이 기간에 늘어났으나, 시간당 상대 임금, 인구 순유입 비중, 제조업 비중은 줄어들었다.

4) 분석 결과

표 2와 표 3은 2015~2022년 기간 전국과 비수도권 제조업 고용변동이 전체 고용변동에 미친 효과를 추정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 기간에 특히 비수도권에서 제조업 고용감소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이는 전국과 수도권으로 나누어 1계 차분 고정 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된 것이다. 표 2는 종속변수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비중인 경우고, 반면에 표 3은 종속변수가 취업자 대비 상용직과 임시·

표 1. 변수 정의와 2015~2022년 변수들의 변동에 관한 기술 통계량

변수	정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상용직 고용률	· 15세 이상 인구 대비 상용직 비중(%): 지역별 고용조사	2.948	1.071	4.789	1.528
임시·일용직 고용률	· 15세 이상 인구 대비 임시·일용직 비중(%): 지역별 고용조사	0.702	0.372	1.158	0.243
상용직 비중	· 취업자 대비 상용직 비중(%): 지역별 고용조사	3.371	1.067	5.256	0.581
임시·일용직 비중	· 취업자 대비 임시·일용직 비중(%): 지역별 고용조사	0.486	-0.129	1.165	2.580
제조업 비중	· 취업자 대비 제조업 고용 비중(%): 지역별 고용조사	-1.570	-0.888	-0.621	-9.459
1인당 사업체수	· 종사자 대비 사업체 수(개): 전국 사업체 조사	0.061	0.000	0.051	0.100
시간당 상대 임금	· 전국 평균 시간당 임금 대비 지역별 시간당 평균 임금 비율: 지역별 고용조사	-0.013	0.009	-0.112	-0.054
인구 순유입 비중	· 진출 대비 전입 비율: 국내 인구가동통계	-0.020	-0.077	-0.021	-1.247
대졸자 비중	· 15세 이상 인구 대비 대졸자 이상 비중(%): 지역별 고용조사	3.603	1.090	0.609	4.967
취업자 대졸자 비중	· 취업자 대비 대졸자 이상 비중(%): 지역별 고용조사	5.510	1.839	2.823	7.239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전국 사업체 조사, 국내 인구가동통계.

일용직 비중인 경우다. 전자는 구직 활동을 포기했던 개인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우와 같이 경제 활동 참가율 변동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에 후자는 노동 시장 참여자 중에 임금 근로자 변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표 2와 표 3을 보면 어느 모형에서나 대체로 추정 결과는 거의 비슷하고, 앞에서 기대한 대로 추정 결과가 나오고 있다. 먼저 종속변수가 15세 이상 인구 대비 고용률인 표 2의 결과를 보면, 어느 모형에서나 제조업 고용 비중과 상용직 고용률 간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조업 고용감소가 일어나면 해당 지역의 상용직 고용률이 평균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조업 고용 비중이 1%p 감소할 때 상용직 고용률이 전국 모형에서 0.466%p, 비수도권 모형에서는 0.483%p로 떨어져 비수도권에서 부정적 고용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제조업 고용감소가 임시·일용직 고용률에 어느 모형에서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는 반대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 제조업체 폐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 이동을 초래하는데, 비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상실한 정규직 제조업 근로자 일부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재취업했을 수도 있다(Georgeson and Harrison, 2015). 지역 제조업 고용감소가 임시·일용직 고용변동보다는 상용직의 그것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미치는 것은 제조업이 세부 업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높은 관공은 일자리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전직 정규직 제조업 근로자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수요 변수인 1인당 사업체 수는 어느 모형에서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지역 수요와 고용률 간 관계가 뭐라고 규정하기가 힘들다. 시간당 상대 임금은 어느 모형에서나 상용직 고용률과 정(+)의 관계를, 반면에 임시·일용직 고용률과는 부(-)의 관계를 일관되게 보여준다. 한 지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국의 그것에 비해 1%p 증가하면 정규직 고용률이 전국 모형에서는 0.186%p, 비수도권 모형에서는 0.206%p로 증가하여 후자에서 그 효과가 크다. 반면에 임시·일용직 경우 그 추정치가 전국과 비수도권 모형 각각

표 2. 종속변수가 15세 이상 인구 대비 고용률인 경우의 추정 결과

	전국	비수도권	전국	비수도권
	종속변수: Δ (상용직 고용률)		종속변수: Δ (임시·일용직 고용률)	
	회귀 계수		회귀 계수	
Δ (제조업 비중)	0.466 (17.36) ^{***}	0.483 (17.24) ^{***}	0.028 (1.47)	0.028 (1.37)
Δ (1인당 사업체수)	3.567 (0.62)	3.133 (0.52)	-2.645 (-0.52)	-2.602 (-0.50)
Δ (시간당 상대 임금)	18.611 (7.70) ^{***}	20.619 (8.05) ^{***}	-10.470 (-4.67) ^{***}	-10.757 (-4.45) ^{***}
Δ (인구 순유입 비중)	0.003 (0.01)	-1.626 (-0.94)	-1.647 (-1.59)	-2.752 (-2.18) ^{**}
Δ (대졸자 비중)	0.125 (3.28) ^{***}	0.131 (3.36) ^{***}	0.065 (2.19) ^{**}	0.089 (2.92) ^{***}
2022년 터미	-0.030 (-0.07)	-0.149 (-0.33)	0.030 (0.09)	0.042 (0.11)
상수	0.040 (0.13)	0.174 (0.53)	0.030 (0.12)	0.028 (0.10)
R ²	0.755	0.781	0.118	0.118
표본 수	264	236	264	236

주: 1) *, **, ***는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표준오차는 강건 오차를 이용하여 추정된 것임.

표 3. 종속변수가 취업자 대비 고용률인 경우의 추정 결과

	전국	비수도권	전국	비수도권
	종속변수: Δ (상용직 고용률)		종속변수: Δ (임시·일용직 고용률)	
	회귀 계수		회귀 계수	
Δ (제조업 비중)	0.729 (18.26) ^{***}	0.754 (18.06) ^{***}	0.054 (1.90) [*]	0.052 (1.71) [*]
Δ (1인당 사업체수)	14.946 (1.67) [*]	13.076 (1.40)	0.104 (0.01)	-1.030 (-0.15)
Δ (시간당 상대 임금)	18.810 (4.51) ^{***}	22.846 (5.48) ^{***}	-17.643 (-5.25) ^{***}	-17.664 (-5.02) ^{***}
Δ (인구 순유입 비중)	-2.613 (-1.17)	-5.594 (-2.27) ^{**}	-2.933 (-1.76) [*]	-5.116 (-2.57) ^{**}
Δ (대졸 이상 비중)	0.448 (7.51) ^{***}	0.457 (7.06) ^{***}	0.142 (3.52) ^{***}	0.189 (4.47) ^{***}
2022년 터미	0.023 (0.03)	-0.077 (-0.11)	0.103 (0.20)	0.177 (0.32)
상수	-0.119 (-0.24)	0.011 (0.02)	-0.089 (-0.23)	-0.134 (-0.31)
R ²	0.770	0.798	0.132	0.146
표본 수	264	236	264	236

주: 1) *, **, ***는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표준오차는 강건 오차를 이용하여 추정된 것임.

에서 $-0.105\%p$ 와 $-0.108\%p$ 로 나타나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이처럼 시간당 상대 임금 부호가 상용직 고용률 모형에서는 양(+)이고, 반면 임시·일용직 모형에서는 음(-)이다. 이는 상대적 임금수준이 상승하면 해당 지역의 고용주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상용직 대신에 임시·일용직을 채용하여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지리적 이동성을 대리하는 인구 순유입 비중 변수는 비수도권 임시·일용직 모형에서만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그 부호는 부(-)이다. 즉 진출 대비 전입 인구 비율이 1%p 증가하면 비수도권 임시·일용직 고용률이 0.275%p 감소한다는 것이다. 즉, 해당 지역 근로자의 지리적(순)이동이 늘어나면 임시·일용직 고용률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이는 비수도권 임시·일용직 고용의 수급 조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숙련 수준을 대리하는 대졸자 이상 비율과 고용률 간 관계는 어느 모형에서나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부호를 보여준다. 이는 대졸 수준의 자격을 가진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 해당 지역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고등 교육을 받은 인구가 증가하면 제조업 고용감소 영향이 일정 정도 완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대졸자 대비 적정 일자리 비중이 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비수도권 청년층 실업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정준호·이일영, 2023).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 고용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의 실업에 대한 완화 효과는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과잉 교육과 일자리 미스매치에 따른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에 대한 우려, 즉 대졸자 증가가 지역 노동시장의 실업률을 완화하지 못할 수도 있다(Georgeson and Harrison, 2015).

고용 가능성과 실업은 별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첫째, 해당 지역이 단기간에 많은 수의

대졸자를 노동력으로 흡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 경제에서 직종의 숙련 인력과 대졸자 양자 간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상이한 기술과 숙련이 있는 인력 간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정록, 2019). 가령, 대졸자가 과잉 공급되는 지역에서 숙련자가 필요한 직종에서 숙련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거나, 대졸자는 기술과 숙련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공간 분업에 따른 분공장 경제구조는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킨다. 마지막 요인으로 지역의 연령 구조 변동을 거론할 수 있다. 대졸자는 청년층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은 중장년층보다 실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

직업 훈련과 교육은 노동시장 조정의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직업 훈련 이수자와 대졸자 모두 고용 가능성이 커지기는 하지만, 실업에 대해 각자가 상이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숙련의 미스매치, 대졸 청년의 실업 증가, 과잉 학력, 연령 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추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과도한 분공장 경제가 비수도권에서 대졸자에 부합하는 적정 일자리의 창출을 제약하고 있다.

표 3은 표 2와 달리 1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아니라 전체 취업자에 대한 비율로 계산한 고용률을 종속변수로 활용한 추정 결과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실질적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추정 결과다. 두 추정 결과 사이에는 어느 모형에서나 회귀 계수의 수준 차이는 있지만, 회귀 계수의 부호 측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특히 전국보다 비수도권에 한정해 추정할 때, 표 3의 추정 결과에서 인구 순유입 변수 역할이 두드러진다. 또한, 전국 모형에서 수요 충격이 상용직 증가에 정(+)의 영향을 한계적으로 미치고 있다.

근로자의 지리적 이동성에 논의를 집중하면, 표 3에서 보듯이, 전국 임시·일용직 고용률 모형과 비수

도권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형 모두에서 근로자의 지리적 (순)이동 증가가 해당 지역의 고용률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난다. 전국과 비수도권 모형 모두에서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농업, 관광, 서비스업 등 시간제 한시적 업무와 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 가능성이 큰 이러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수도권 상용직 모형에서도 한계적이기는 하지만 이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에서는 근로자의 지리적 이동성이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 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요약과 시사점

이제까지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심화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격차를 산업·직업별 일자리의 공간 분포 분석, 4년제 대졸자의 지역별 하향취업률 산정, 일자리 접근법을 이용한 지역별 일자리 분포 추정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다. 또한,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수도권 지역에서 감소하는 제조업 고용감소가 전체 고용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추정했다. 이하에서는 위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간략히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생산자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업은 수도권 비중이 가장 큰 산업으로, 그 비중이 2010년대 중반 이후 더 증가하고 있다. 이와 연관되어 관리·전문·사무직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둘째,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임금 근로자 대비 지역별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 이 기간에 비수도권 비중이 비수도권의 그것보다 더 크다. 고용 형태 측면

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수도권에 더 집중되어 있다.

셋째, 이 기간에 수도권의 4년제 대졸자 증가 대비 적정 일자리 증가가 더 커서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서 더 많이 창출되었으며, 하향취업률은 2010년대 초반 이후 계속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수도권의 하향취업률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수도권의 그것은 이와 달리 매우 완만하게 증가했거나 횡보했다. 또한, 하향취업률의 수준 자체가 비수도권에서 매우 큰데, 이는 분공장 경제의 체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산업과 직업으로 구성되는 쌍을 하나의 일자리로 보고 그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서열화하는 일자리 접근법에 따르면, 2008~2012년 기간에 비수도권의 50 분위별 고용 증가율 패턴은 역 U자형, 반면에 수도권의 그것은 역 L자형이 나타났다. 그런데, 2016~2020년 기간에는 정반대 현상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는 저임금과 고임금 일자리가 동시에 증가하고 중간 일자리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양극화 패턴인 U자형 패턴이, 반면 수도권에는 고임금 일자리 증가가 주도하는 좌우가 뒤바뀐 L자형 패턴이 나타났다.

다섯째, 일자리 분포가 2008~2013년 기간과 2016~2020년 기간이 대조적인 것은 중간 분위 일자리를 다수 차지하는 제조업의 고용변동과 연관이 있다. 비수도권의 제조업 고용 규모는 2015년 이후 감소세이지만, 2019년 이후 수도권의 제조업 비중은 증가세다, 특히 후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섯째, 2015~2022년 기간에 대해 지역 제조업 고용변동이 전체 고용변동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고용감소는 해당 지역의 상용직 고용률을 떨어뜨리며, 비수도권에서 부정적 고용효과가 더 크다. 전반적으로 상대 임금의 상승으로 고용주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상용직 대신 임시·일용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 근로자의 지리적 (순)이동은 특히 비수도

권의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고용의 수급 조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대졸자 증가, 즉 교육과 훈련 투자로 제조업 고용감소의 영향이 일정 정도 완화될 수는 있지만, 숙련의 미스매치, 대졸 청년의 실업 증가, 과잉 학력, 연령 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고용 가능성을 제약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구상과 실행의 공간적 분리에 따른 분공장 경제 체제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공간 구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분공장 경제 체제다. 이는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의 지역별로 상이하다는, 즉 구상과 실행 기능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공간 분업을 전제한다. 따라서 숙련, 반숙련, 미숙련 등 다양한 직무가 기업의 숙련 수요에 따라 공간적으로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숙련 수준별 불균형적인 일자리의 공간 분포도 문제지만, 중심과 주변 간에 경제적 권력 행사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숙련의 공간 구조는 비수도권에서 양질의 일자리의 창출을 제약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수도권은 주로 생산 기능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비수도권 제조업 발전이, 일정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기는 했지만, 비수도권의 소득 증가와 고용 안정의 버팀목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지속적인 역외 소득의 유출은 역설적으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일정 정도 기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비수도권 제조업 성장세가 2010년대 중반 이후 흔들리고, 급속한 기술 진보로 대규모 산업단지 대신에 수도권 내 클러스터가 만들어 내는 혁신적인 일자리가 주목받으면서 청년층의 수도권 선호 현상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증폭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약되어 있다는 현실의 구조적인 측면을 반영한다(정성훈, 2021; 남기범, 2023).

이러한 공간 구조가 청년층의 수도권으로 직업 탐색 유인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음에도 기존 지역 고

용과 산업정책은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 수도권 중심의 단핵 공간 구조에 균열을 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비수도권 거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빅 푸시(big push)’ 방식의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역 간 형평성 논리로 이를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지역 정책은 비수도권에 이러한 거점을 키우는 동시에 거점 내 중소 규모의 상이한 지역들에 대한 다양한 차별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투 트랙(two track)’ 방식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국 차원에서 공간 규모에 따라 1/n 방식으로 수행되는 표준화된 지역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둘째는 지리적 이동성과 숙련 이동성의 혼합, 즉 장소 기반과 사람 중심 정책의 혼합에 관한 것이다. 앞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수도권에서는 지리적 이동성이 노동시장의 수급 조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특히 비수도권에서 노동력의 지리적 이동을 통한 일자리 탐색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지역 정책은 장소 기반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람 중심 정책에 기반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노동 이동성에는 지리적 이동성과 숙련 이동성이 있다(Farcy *et al.*, 2013; 정준호·고영우, 2014). 지리적 이동성은 노동 이동성의 한 측면이고, 교육과 훈련을 통한 숙련 이동성도 노동 이동성의 또 다른 측면이다. 이처럼 지리적 이동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숙련 이동성을 강화하는 장소 기반 정책은 적실성이 있는 것인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지리적 이동성이 증가하면 근로자는 노동 수요가 가장 높은 직업, 산업 및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기업과 산업의 구조 조정이 더 쉬워지고, 이러한 조정은 상대 임금에 대응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근로자가 지리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면, 다른 지역의 기회가 활용되고 숙련 미스매치가 완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지리적 이동에는 상당한 거래비

용과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이는 모든 근로자가 무차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손쉬운 선택이 아니다. 예를 들면, 거주지 마련과 연관된 비용이 많이 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드는 구직 비용도 상당하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옮기는 것을 꺼리는 등 사회적 비용도 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가 갖게 지리적 이동성 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지리적 이동 능력이 약한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가 클 수 있으며, 이는 긴장과 균열을 일으켜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근로자의 지리적 이동성을 촉진하는 사람 중심 정책은 선별적인 인구 이동으로 이처럼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으며, 이러한 이동성이 누구나 똑같이 기회에 열려 있지도 않다. 반면에 다른 무엇보다, 장소 기반 정책에 대한 핵심 비판 중 하나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고용과 소득이 이동함으로써 다른 지역을 희생시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근린 궁핍화(beggar-thy-neighbor) 정책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Ehrlich and Overman, 2020).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러스트 벨트와 같은 문제 지역이 정치적 포퓰리즘의 기반이 되면서 장소 기반 정책은 OECD, EU, 최근에는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정준호, 2021).

하지만 장소 기반 중심 정책과 사람 중심 정책을 이분법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맥락에서 장소 기반 정책의 경우 정책 시행의 공간 규모가 불명확하다. 지역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은 기초지자체부터 광역지자체를 모두 포괄하고, 주어진 공간 수준에서 공모 방식 경쟁으로 정책을 시행한다. 이렇게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정책의 공간 규모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상이한 공간 규모에 따른 정책 간 차별성을 찾기도 쉽지 않다. 또한, 공모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상이한 공간 규모에 따른 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소 기반 정책은 구조 개혁을 저해하는 제도적 잠금(lock-in)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반면에 사람

중심 정책은 선별적 인구 이동으로 이어져 지역 공동화가 나타날 수가 있으므로, 이 두 정책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의 공간 규모 설정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대로 초광역 수준의 거점을 기반으로 역내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장소 기반 정책을 펼쳐 청년층의 괜찮은 일자리 기회를 역내에서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중소 규모 지역별로 내생 역량을 충분히 배가할 수 있는 장소 기반 지역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처럼 해당 산업에 필요한 기술이 특정 산업에 한정된 경우, 근로자는 같은 산업 내 일자리 간 이동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쇠퇴하는 산업은 일자리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 산업 종사자가 직업을 바꾸더라도 같은 산업에 머물러 있기가 어렵다. 제조업 고용이 빠르게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전직 제조업 근로자가 많으므로 제조업의 지리적 이동성이 낮을 수도 있다. 이처럼 제조업 근로자의 지리적 이동성이 다른 산업 근로자보다 낮다는 것은, 제조업의 고용감소가 다른 산업에 비해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Georgeson and Harrison, 2015). 이는 2010년대 중반 비수도권 일부 지역의 구조 조정으로 고용위기 지역에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 경우 숙련 이동성과 지리적 이동성을 혼합한 구조 재편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고용 가능성 제고와 일자리 문제에 관한 것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적정 일자리 대비 대졸자의 과잉 공급이 나타난다. 이는 무엇보다도 구조적으로 분공장 경제 체제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외에도 숙련의 미스매치, 대졸 청년의 실업 증가, 과잉 학력, 연령 구조 변화 등과 연관이 있다. 교육과 훈련 투자로 근로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고용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4년제 대졸자의 고용변동 완화 효과가 있지만, 비수도권 내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 과잉 학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직업 교육과 대학 교육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비수도권은 제조업의 생산 기능이 상대적으로 집적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숙련의 미스매치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비수도권 내 대졸 청년층은 괜찮은 일자리 구직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지만, 직업 교육을 이수한 숙련된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다.

기존 지역 정책은 이 지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소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편향적인 인 지적 숙련 이외에 사회적 숙련, 경험적 숙련 등과 같이 다양한 숙련 역량을 계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협력, 연계, 경쟁 능력을 배양하는 숙련 이동성 제고’가 필요하다(정준호·고영우, 2014).

마지막으로 단기와 장기 대응의 문제가 있다. 일자리 접근법을 통해 일자리 분포를 보면 2008~2012년 기간과 2016~2020년 기간은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특히 비수도권은 두 기간에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이처럼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모두 일자리 분포가 경기변동에 따라 이처럼 급변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서구의 경험을 보더라도 일자리 분포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은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서 중요하다. 가령, 일자리 분포가 양극화 패턴을 보여준다면 제조업과 같은 중간 일자리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구조 개편 정책이 관심사로 등장한다.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려는 ‘제조업 르네상스’는 이를 잘 보여준다.

2010년대 후반 이후 비수도권 일자리 분포가 경기변동에 따라 너무 급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지를 판단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적실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변동에 따라 임금 불평등 분포가 급변한 경우라면, 정책은 단기적 경기 대응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후 일자리의 양극화 패턴이 산업구조 변동을 알려주는 신호라면, 정책적 대응은 달라져야 한다. 즉 심

층적인 장기적 정책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꿔 말하면, 2008~2012년이 중국경제의 호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된 시기에 불과하고, 긴 흐름은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 패턴이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임금 불평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정밀한 모니터링이 지속해서 필요하고 증거 기반 정책은 유효하다.

주

- 1) 이 글에서 쓰이는 비정규직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정규 직근로자’를 말하며, 이는 일차적으로 고용 형태에 의해 정의되며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 2) 통계청 MDIS 홈페이지에서 2020년 이전까지 지역별 고용조사 A형 산업과 직업 중분류 수준 마이크로 자료에 대한 다운로드가 가능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중분류 수준 마이크로 자료는 원격접근서비스(RAS)를 통해서만 제공된다.

참고문헌

- 김기홍, 2018,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하향취업,” KLI 패널브리프, 2018년 2월호, pp.1-9.
- 남기범, 2023, “산업클러스터에서 혁신지구로: 도시의 산업혁신과 거버넌스,”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6(3), pp.169-189.
- 남재량, 2007, “비정규 근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30(2), pp.1-31.
- 상명성·문명만, 2024, “비수도권 대졸 청년의 취업 및 수도권 유출 결정요인- 부모 소득과 노동시장 성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7(1), pp.349-366.
- 성재민, 2014, 임금 불평등 추세와 원인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오삼일·강달현, 2019, “하향취업의 현황과 특징,” BOK 이슈노트, 제2019-4호, pp.1-9.
- 이상호, 2013, “수도권 대 비수도권 고용의 질 변화에 관한 분석,” 지역고용노동연구 5(1), pp.47-72.

- 이상호, 2022, “지방 고용대책, ‘각자 도생’하면 살아남기 어렵다,”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5(2), pp.274-276.
- 이성균, 2011, “‘좋은’ 일자리의 지역별 비교 및 요인분석: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2(2), pp.5-29.
- 이정록, 2019, “지역 일자리에 대한 잠재적 구직자의 선호도 분석: 광양제철소 협력사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2(3), pp.337-350,
- 임석희·송주연, 2022,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와 회복력의 지역적 특성: 도시 고용위기와 회복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5(3), pp.281-298.
- 전병유·정세은, 2017, “일자리 분포의 변화와 동인에 관한 연구: 1993-2016년,” 경제발전연구, 23(2), pp.31-58.
- 정이환·전병유, 2001, “1990년대 한국 임금구조의 변화: 내부노동시장은 약화되고 있는가,” 경제와 사회, 52호, pp.156-183.
- 정성훈, 2021, “한국의 산업발전과 경기도의 역할: 국가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4(3), pp.232-242.
- 정준호, 2021, “글로벌 가치 사슬과 한국의 지역 간 격차: 201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31호, pp.88-125.
- 정준호·고영우, 2014, “고용과 지역산업정책,” 이규용 외, 한국의 지역고용전략(I): 이론과 쟁점,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pp.41-73.
- 정준호·남종석, 2019, “근로자의 결합노동시장지위가 임금 분포에 미친 효과,” 동향과 전망, 106호, pp.229-267.
- 정준호·이일영, 2023, “한국형 성장 체제의 전개와 위기: ‘비공유적 저성장’ 모델로의 이행,” 동향과 전망, 119호, pp.43-86.
- 한치록, 2021, 패널데이터 강의(제3판), 서울: 박영사.
-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CEA), 1996, *Job Creation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The United States Labor Market, 1993-1996*, US Department of Labor, Washington D.C.
- Ehrlich, M. and Overman, H., 2020, “Place-based policies and spatial disparities across european citi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4(3), pp.128-49.
- Eurofound, 2013, “Employment Polarisation and job quality in the crisis,” Eurofound, European Jobs Monitor (= 한국노동연구원 번역, “경제위기 중 고용 양극화와 일자리의 질,” 국제노동브리프 11(7), pp.3-80.
- Farchy, E., Maguire, K., Oliveira Martins, J. O. and Tompson, B., 2013, “A regional (place-based) policy approach for innovation and jobs,” Mimeo, Paris: OECD.
- Georgeson, C. and Harrison, A. W., 2015, “Regional impacts of the accelerated decline of the manufacturing sector in Australia,”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Department of Industry and Science, Australian Government, Research Paper 1/2015.
- Massey, D., 1984, *Spatial Divisions of Labour: Social Structures and the Geography of Production*, London: Macmillan.
- Wright, E. O. and Dwyer, R., 2003, “The patterns of job expansions in the USA: a comparison of the 1960s and 1990s,” *Socio-Economic Review* 1(3), pp.289-325.
- 교신: 정준호,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전화: 033-250-6838, 이메일: jhj33@kangwon.ac.kr
- Correspondence: Jun Ho Jeong, Department of Real Estat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Kangwondaec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Korea, Tel: +82-33-250-6838, E-mail: jhj33@kangwon.ac.kr

최초투고일 2024년 08월 31일

수정일 2024년 09월 25일

최종접수일 2024년 09월 29일